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을 읽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립 부분과 관련하여(이정식 지음, 일조각, 2006)

이 지 ㅅ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원』에 대한 서평을 부탁받았을 때 무척 망설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이 책의 著者인 이정식 선생님(이하 저자라고 約稱, 敬稱 생략)은 高名하신 원로학자로서 평자같은 淺學菲材한 처지에서 감히 저자의 글을 놓고 평한다는 것이 도대체 주제넘은 일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둘째는, 읽어 본 독자들이면 응당 아는 것이지만, 이 책의 내용이 워낙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기껏 몇 년간 舊 소련의 고문서 자료를 들춰 본 평자로서는 당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에 역부족이라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50년간 북한연구에 종사”해 온 저자가 “지난 30여 년간 출판했던 논문들 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관련 있는 글들을”(이하 인용부호는 본 저서의 직접인용임) 모아 增補하고 수정한 글인지라 이 책에 대한 서평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각 방면의 전문가 여러 명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이런 이유 외에도 사실 평자가 이 글을 쓰기를 꺼린 개인적인 이유가 또 있다. 그것은 평자의 先親(故 이명영 성대 교수)이 저자의 다른 저서, 『朝鮮勞動黨小史』(東京:코리아評論社)에 대한 짧은 서평을 쓴 적이 있는데, 서평의 제목이 <공부 부족한 엉터리 내용>이라는 것이었다. 제목은 게제 잡지의 편집부에서 달았다 하더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목이 편집부의 독창적인 작품이라고만 볼 수 없음을 피할 수가 없다. 아마 이쯤이면 독자들도 평자의 私的인 곤혹스러운 입장을 헤아릴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기억이 평자로 하여금 글을 써야겠다는 의무감 비슷한 것을 가져다주었기에 원고청탁을 수락하였다는 말과 함께 시작한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평자는 이 글에서 저자의 책 내용 전체를 다루지 않고 평자가 공부한 부분 즉, 소련의 북한에 대한 정책과 관련한 부분만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책의 제목은 “대한민국의 기원”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것도 소련과 관련한 부분만을 다루기에 이 서평의 제목은 책을 ‘읽으면서’이다. 평자가 공부하려는 부분과는 다소 어긋나지만 앞으로 찬찬히 이 책을 통하여 더 공부하려는 소망을 담은 뜻이기도 하다.

이 책은 11장의 독립된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11장의 전체 글을 통해 나타난 소련의 대북한 정책과 관련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다루어 보겠다. 저자도 지적했듯이 “현대사는 냉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해방 전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특히 분단과 분단의 固定化에 관한 일들을 미국의 탓으로 돌려 버렸고, 소련은 미국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었다는 억측을 하게 되었으며, 그 억측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저자는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학계는 右에서 左로 추가 움직여 갔다”고 전제하면서도, “소련의 붕괴 후 관련된 문헌들이 공개되기 시작하여 역사 바로잡기가 시작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이를테면 스탈린의 9월 20일자 지령문이라든가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과 이를 토대로 쓰여진 젊은 후학들의 글을 참고로 하여 소련의 북한에 대한 정책을 책의 여기저기서 記述하고 있다. 새삼 老學者의 끊임없는 연구 자세에 後學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이 책의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아니지만¹⁾ 저자가 소련의 대북한 정책과 관련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은 애초부터 북한에서의 단독정권 수립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이루었다는 것이다. 1946년 초에 시행된 토지개혁이나 이북 5도 임시인민위원회의 설치의 이미 북한을 남한과는 합칠 수 없는 還元 불가능한 체제로 만들었다는 것이 평자가 이해하는 저자의 결론이다. 둘째, 스탈린의 주도하에 6·25 전쟁이 일어났음을 확인하고 있다. 과거의 다른 책에서²⁾ 저자는 흐루시초프의 회고록에 근거해서 김일성에게 전쟁 발발의 책임을 적용하였으나 이 책에서는 스탈린의 주도를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서 본인의 견해를 수정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龜鑑이 아닐 수 없다.

1)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의 기원이라고 평자는 읽었다.

2) 이정식, 『朝鮮勞動黨小史』(東京: コリア評論社, 1980).

평자는 이와 같은 저자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다만 부분, 부분을 읽어 가면서 연방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어떤 부분들에 가서 가끔 고개를 가우뚱하게 되는 대목이 있으나 그것은 앞서 언급한 결론이라는 큰 가지에 비하면 작은 잔가지에 불과한 부분들이다. 이쯤 되면 더 이상의 독후감이 필요 없을 듯도 싶다. 그러나 이야기를 옆으로 살짝 비켜가면서 더 좀 자세히 들여다 볼 부분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예의 큰 가지와 잔가지들에 대한 부분이다. 평자가 구 소련의 古文書室에서 자료들을 들춘답시고 시간만 축내던 시절의 경험을 돌이켜 보건대, 지난 역사를 문서로만 재구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에 대한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아마도 오늘날과 같이 공유가치가 다원화되고 실제 사는 사람들의 직업도, 계급도(계급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는 별도로 치고) 다양한 시대의 기록들은 아마 그 사회의 時空間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다양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훗날의 史家들이 오늘의 사회를 그렇게 다양하게 이해하고 묘사해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보다는 사회의 공유가치가 덜 다양하고 인구도 작고, 외부와의 소통도 덜 했고, 직업도 다양하지 못했던 해방공간의 시대는 과연 얼마만큼 다양했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훨씬 단순하게 이해되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은 단지 시공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당시 소련의 스탈린체제라는 대단히 이념지향적인, 혹은 교조지향적인,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의 특성 또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쏠는 당시의 시공간은 우리가 오늘날의 시공간을 바라보는 것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수많은 고문서들을 뒤지다 보면 결가지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결가지들을 일일이 쫓다 보면 정작 기껏 잡았다고 생각한 큰 줄기가 무색해지는 순간들을 접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시대는 문서와 증언들이 얘기하듯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역동적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평자의 생각이다. 찰스 암스트롱의 표현을 빌면, 북한 주둔 소련군의 상위 정치라는 '큰 그림'(큰 가지-평자)에 북조선 인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끼친 '작은 영향'('잔가지'-평자)들에 의해서 북한은 탄생한 것이라고 보면 어떨까?³⁾ 요컨대 당시를 제대로 보려면 좀 더 큰 가지에 집착하되 결가지를 아울러

3) 찰스 암스트롱, 『북조선 탄생』(서울: 서해문집, 2006). 그러나 이 책의 주조는 평자의 견해와는 달리, 북조선의 성립에 있어서 '큰 그림' 보다는 '작은 영향' 들을 더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큰 가지란 무엇인가? 먼저 당시 조선의 북반구에서 일어난 일은 과연 거기서만 있었던 특수한 현상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당시 한반도 북부에만 집중했던 눈을 뒤로 한 발짝 물러나 비슷한 시기에 소련군이 점령한 동구 지역을 바라보면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예외 없이 인민민주주의 노선이니 부르주아 민주정권이니 하는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당시 노동당 혹은 노동자당이라고 改名된 기존의 공산당이 포함된 연립정권이 들어서고, 토지개혁이 있었고, 그리고는 소련에 順應的인 그룹만 남고 나머지 세력은 숙청되거나, 逐出되고, 결국 정권을 단독으로 잡은 세력들은 다시 공산당으로 재개명한 사례가 눈에 들어온다(그러나 조선노동당은 조선공산당으로 재개명하지 않았다. 아마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통일전선 과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쯤 되는 시기에 이르면 토지개혁은 농업집단화라는 이름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애초의 토지개혁은 용어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뿐, 실제 내용은 국유화에 다름 아니었다. 애초 소련이 그랬었다. 그렇다면 1930년대 이미 다시 농업집단화로의 개혁 경험을 한 소련이 점령지역에서 토지구유화와 아울러 집단농장화로 직접 가지 않고 왜 먼저 토지개혁이라는 이름의 개혁을 했다가 몇 년 후에야 농업집단화로 迂回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저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1945년 12월 25일자 슈킨 장군의 보고서에⁴⁾ 의하면 그 이유가 밝혀진다. 즉, 북한에서 친소 세력을 중심으로 한 단독 정권 수립을 방해하는 지주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토지개혁이었던 것이다. 소련 점령지역에서의 당시 토지개혁은 우리가 흔히 아는 '無償分配'의 개혁이 아니라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면 기득권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無償沒收'의 정책이었던 것이다. 반복하면, '분배'의 이름을 내걸고 '몰수'를 감행한 것이다. 그 분배라는 것도 所有權의 분배가 아니라 耕作權의 분배였기 때문이다. 분배받은 토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수도 없고, 상속할 수도 없는, 국가가 지주였던 국유화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마저도 곧 농업집단화로 轉移된다. 북한에

4) 당시 소련군 총정치 사령관, Joseph Schkin의 "북한의 정치상황"이란 제목의 1945년 12월 25일자 비밀보고서에 대해서는, 평자, "북한체제 형성과 소련의 영향."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33.

서는 동구 국가들에 비해 몇 년 늦게 농업집단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전쟁이 끝난 후의 일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이러한 변화 패턴은 소련이 이미 십수 년 전에 얻은 경험이었으며, 당시까지 소련에서 지속된 현실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는 소련측이 계획한대로 농업집단화가 빠진 토지개혁이 먼저 진행되었다. 결국 우선은 정권 반대세력의 기반을 제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본격적인 사회주의화를 채택한 셈이다.

그렇다면 당시 한반도에서 그러한 토지개혁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던 조선인은 얼마나 되었을까? 만일 박헌영이나 김일성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인민을 欺瞞한 것이었고, 몰랐다면 소련에 이용당했던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저자는 박헌영의 경우, “토지가 국유농장으로 변조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박헌영 자신이 주장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 이론에 비추어 볼 때(이탈릭체 평자 첨가) 이론적인 誤謬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헌영이 주장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에 대해 “실제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다소 모순된 진술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이 부분을 저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단계에 앞선 단계로서의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을 박헌영은 알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뜻(프롤레타리아 혁명-평자)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자 역시 동의한다. 저자가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스탈린의 소위 9월 20일자 지령서에서도 북한에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을 構築하라고 되어 있음에 주목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르주아 민주주의정권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동 문서에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개념은 허구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그제나 이제나 공산주의자들의 독특한 용어 사용 방법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령 북한의 당시 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을 둘러싸고 벌인 논의들에 대한 증언이나 기록에 의하면, 소련 외무성의 토지개혁안 등을 토대로 수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은 소련의 의도대로 되었다’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그러한 잔가지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결국 소련의 논의대로 결론이 이미 나 있던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라는 차이의 흔적들로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혹은 알면서도 논의를 위한 논의를 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소련에서는 스탈린의 대숙청이 있

있던 1930년대를 거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회의는 자유로운 토론이라기보다는 정해진 결론을 追認하는 성격으로 변했다는 것이 구 소련의 고위 관료들의 회고록들에 심심찮게 나온다.⁵⁾ 그리고 그것이 당시 소련의 스탈린 통치체계의 기이한 모습이기도 하였다.

많이 돌아 온 느낌이 든다. 정리하면 당시 한반도 북부에서 유일한 힘은 소련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인민의 저항이나 이견은 초기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충분히 진압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러한 힘을 이용하거나 便乘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낀 者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반대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은 쪽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後者の 경우는 조만식의 운명이 대표적으로 웅변하듯이 유감스럽게도 당시 소련 당국에 의해 수용되었거나 혹은 당시 상황에 작용한 흔적이 없다. 저자나 평자도 이에 일치하고 있다. 소련은 자신들의 의사를 유감없이 관철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제거되었고, 남아서 권력을 잡은 이들은 소련에 적어도 소련측의 판단으로는 順應한 자들이었다. 많은 반대 세력들이 소련으로 압송되거나 처형, 숙청되고, 그래도 용케 살아남은 자들은 남한으로 향하였다. 이로써 북한에는 대단히 단순한 정치적인 지형이 형성되었다. 이 점은 같은 소련의 점령 지역이었으면서 분단되지 않았던 동구의 여러 나라들에 비하면 확실히 다른 독특한 상황이었다. 반대세력의 탈출 여지가 있고 없었음은 이후 동구에서 보여 주었던 저항의 현상이 북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대목에 이르면 당시를 살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라면 어떻게 소련 당국에 의한 일방적인 관철이 가능했느냐는 의문이 제기 될 직하다. 이 문제는 단지 역사적인 照明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성에 대한 성찰과 권력에 대한 욕망, 역사 구성원들의 離合集散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정치학도로서 소위 정치학적 사고의 출발 공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도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이것이 아쉽다고 한다면 평자가 너

5) 가령, 소련 해체 당시 소련 공산당 국제부 제1부부장이었던 K. H. Брутенц, *Трицать лет на Старой площади(30 Years on the Old Square)*,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8). 이외에도 Yevgenia Albats, Ilya Dzhirkvelov, Oleg Gordievsky, Oleg Kalugin, Pavel Sudoplatov, Анатолий Добрынин, Анатолий Громыко, Ва дим Сопряков, Александр Яковлев의 회고록들이 있다.

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 어쩌면 정치학의 기본 문제의 하나이기도 하려니와 평가가 매진할 부분으로 남겨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이러한 큰 줄기를 확인하면서 이제부터는 다소 곁가지라고 인식되는 부분들에 대해 언급하겠다. 첫째로, 저자는 당시 박헌영을 爲始한 조선공산당의 미숙성과 급진성, 주체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 “書生的 혁명가” 혹은 “翻譯生的 이론가”였음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박헌영의 8월 테제라든가 토지개혁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이 부분은 김남식, 심지연의 책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가 보기에 가령 박헌영은 “서생적 혁명가”라든가 “번역생적 혁명가”라기 보다는 1920년대 후반 모스크바에 유학하여 직업적인 혁명가로서 훈련을 받은, 비교적 당시의 자칭 타칭 조선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준비된 촌이다. 동시에 이 사실은 그의 공산주의 운동의 한계 내지 방향을 추측케 한다. 그도 그런 것이 그는 해방이 되고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소련 영사관의 샤브신을 만나 熟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의 부인 샤브시나의 회고). 그리고 나온 것이 ‘8월 테제’이다. 아마도 박헌영의 이후 혼란스러운 軌跡은(反託에서 贊託으로 입장을 바꾼 것 같은) 소련의 방침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부터인가 배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당시 소련의 지침은 서울의 박헌영보다 평양에 있던 김일성에게 모아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맥락에서 박헌영의 지도력에 대한 貶下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대적으로 당시 김일성의 지도력을 높게 평가하는 주장으로 歸結되기 쉽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학문적으로도 순수하지 못하다. 사실 김일성은 체계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이나 직업 혁명가로서의 훈련을 받은 흔적이 없다. 그가 공산주의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研鑽했을 가능성은 1940년대 초부터 해방 직전까지 소련의 영토에 머문 때로 짐작되지만 당시의 교육내용은 직업혁명가라기 보다는 게릴라 요원 양성의 성격이 더 짙었다.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세력의 혼선은 소련 전시 행정체제의 기이성이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박헌영에게 모스크바의 방침이라는 고급 정보가 미치지 못한 탓으로 보아야 공정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주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저자의 지적은 일견 날카로아 보이지만 이 혐의는 김일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스탈린의 1945년 9월 20일지 지령문에 관해 저자는 런던회담을 계기로 스탈린의 입장이 바뀌었을 것이며, 현장의 소련군 당국자들에게도 내용 전달이 늦어

졌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박헌영이 해방 직후 서울에 올라와 소련 영사관측과 접촉하여 숙의를 거친 결과 나온 8월 테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라는 주장을 상기하면 이미 그 이전에 스탈린의 방침이 정해진 것이 아닐까. 게다가 상기 지령 문서를 특종 보도한 마이니찌 신문 모스크바 지국으로부터 평자가 입수해서 확인 한 바로는, 9월 20일자 문건(암호 전송된 텔레그램의 복사본)의 寫本에는 최고군사소비에트 서기에게 접수된 날짜가 手記로 加筆되어 있는데 1946년 9월 12일字이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 당시 모든 소련의 문서들은 原案대로 내용이 타이프 된 위에 그 문서들이 해당 부서에 전달 접수된 날짜가 필기체로 加筆되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소련최고군사평의회 서기국에 1년여가 지나서 접수된 점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실제 1945년 9월의 비밀 지령이 당시 최고군사령관인 스탈린과 참모총장이었던 안토노프 장군에게서 최고군사소비에트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바실렙스키 당시 극동군총사령관과 연해주군관구 군사소비에트 및 25군 군사소비에트에 전달되었거나 아니면 날짜의 誤記일 수 있다. 前者라면 소련의 당시 전시 작전 지령 라인의 독특함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스탈린은 제도적으로 정해진 라인에 따라 보고받고 지령하기 보다는 단계를 무시하고 각 해당 단위에 直屬으로 상호 접촉하는 패턴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이 문서의 발송과는 별도로 당시 스탈린과 직속 라인에 있던 현장의 어느 부분에선가는 익히 그 내용을 熟知하고 있었을 터이다. 소련의 당시 대부분의 문서들이 발효된 날짜와 접수된 날짜들의 차이가 부서의 遠近에 따라서 차이가 날지언정 1년이 걸리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 접수된 날짜와 原案이 발동된 날짜는 대체로 같거나 대부분이 부서에 따라 하루이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체로 문서들이 人便이 아니라 電送된 탓이다. 그러므로 這間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本 암호지령문이 9월 20일字로 명기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북한 주둔 군사령부의 상층부에 전달된 날짜이지 실제 내용이 스탈린의 직속 현장 단위에 전달된 것은 그 이전일 수 있다. 결국 이미 박헌영이 해방 직후 소련영사관과의 접촉 후 나온 8월 테제(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라고 규정함)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 내용의 최초 생성과는 별도로 각 단위마다 전달된 시기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스탈린의 통치 스타일에 비추어 볼 때, 현장의 관계자들에 따라서는 그 내용

이 시간차를 두고 숙지되었을 것이라는 저자의 추측은 타당할 것 같다. 동구권의 소련 점령지에서의 手順을 볼 때 이미 소련은 기왕의 모든 점령지에서는 적어도 지배권을 양보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그 관철 과정이 단순하고 일률적이지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스탈린이 조선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혹은 덜 중요하게 생각한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런던 회담 이전에 이미 9월 20일자 지령의 내용을 생각했음을 8월 테제에서 읽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모두에게 숙지된 것은 時差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고군사소비에트에는 1년이 지나서 전달되었듯이 말이다.

셋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자는 6·25 전쟁의 주도권을 스탈린에게로 돌린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여러 자료를 가지고 論證하고 있다.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평자의 정황 추정을 덧붙여 본다. 6·25와 관련해서 공개된 소련의 자료들은 김일성이 스탈린의 對談錄을 근거로 김일성 주도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당시 사회주의 조국 소련의 위대한 지도자 스탈린과 자그마한 新生 사회주의 공화국의 젊은 김일성의 위상을 비교해 볼 때, 과연 兩者의 대담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던 案件을 김일성이 제기할 수 있었을까? 아무래도 면담 자리에서 김일성이 건의하는 형식 절차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백번 양보해서 회담 前에 미리 김일성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면담에 그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전쟁 勃發의 책임은 스탈린이 져야 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 설명하겠다. 가령 어느 가족이 여름 휴가철에 피서를 간다고 할 때, 바다로 가자는 부모의 말에 아이가 산으로 가자고 졸라서 결국 산으로 갔다고 하자. 이 경우 산으로 휴가 간 것은 과연 아이가 주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이는 그 계획을 단독으로 실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산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듯 소련의 자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면밀하게 재해석하는 배려가 필요하기도 하다. 저자가 그런 결론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당시 북한의 지도부는 한국전쟁의 주동자가 아니라 스탈린의 전쟁의 수행자, 傭兵이었다는 것이 평자의 생각이다.

넷째, 저자는 “스탈린은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投下한 8월 6일 직후부터 미국을 假想敵國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며, 스탈린의 정책이 미국의 태도에 따라 반응하여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스탈린의 一國사회주의론을 보더라도 2차 대전 당시 소련이 어느 순간이라도 자본주의 제국인 미국을

同志로 인식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생각이다. 스탈린의 소련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제국으로서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를 敵으로 인식하였다. 스탈린의 최측근인 소련 비밀경찰의 총수 베리야의 오른팔이었던 파벨 수다플라토프의 회고록을 보면 소련은 전쟁 중 한시라도 미국을 동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것은 대외첩보조직의 생리상으로도 그러할 뿐 아니라 스탈린주의 대미정책의 일관된 특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금의 북한 미사일 문제, 북핵문제와도 연결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결국, 저자의 견해를 좇아 소련의 대미 적대감이 미국의 원폭을 계기로 새롭게 생성되었다 해도 아무튼 그 이후부터 스탈린의 대북한 정책은 미국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반응했다기 보다는 당초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평자의 주장이다. 이 점은 소위 해방 3년간 북한에서 소련이 직접 행동으로 옮긴 사실들과 미국과 주거니 받거니 씨름을 벌인 과정을 분리해서 보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 북한 주둔 소련 당국의 남한 주둔 미군 당국과의 대화는 실제 북한내부에서 단독정권 수립과정에 작용 했다고 보다는 오히려 다음 두 가지 결과만을 초래했다. 첫째 소련 및 북한의 조선인들에 대한 평가나 그들과의 대화 지속여부를 둘러싼 남한 내부 여론의 갈등과 분열, 둘째, 그런 와중에 소련측의 의도대로의 단독정권을 수립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해준 셈이 그 결과이다.

당시 상황이 미시적으로 보면 대단히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 역동성이란 수많은 결과지의 흔들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큰 줄기는 대단히 일관되게 진행되었지만 결과지가 우리의 당시 인식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 않은 우리가 그것을 재구성하려 할 때 문서, 증언, 인터뷰 등은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세세한 모든 것들을 時間順으로 늘어놓고 앞서 일어난 일을 뒤에 일어난 일의 계기로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즉, 시간적인 前後관계를 그대로 사안 전개에 因果관계로 해석하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의 최근 일련의 행위도 미국과의 관계 속에 불거진 일련의 인과관계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있지만, 한번쯤은 그러한 시간적 전후관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말고 북한이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자가 소련의 대북정책을 독립적이고 다소 일방적인 전개과정으로 파악하듯이 말이다. 되풀이 하면, 당시의 시공간에서 북한의 성립과

정을 바라볼 때 큰 즐거움을重視해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날 북한의 대외행위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의 저서는 과거의 재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우리에게 慧眼을 갖게 해준다.

마지막은 부르조아 민주 정권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는 始終 소련에 ‘우호적인’ 정권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여기서 ‘우호적’이란 앞서 언급한 1945년 12월 25일자 소련군 총정치사령관인 슈킨장군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즉, “예의 스탈린의 9월 20일자 지령문에 따라서.... 한반도의 이북지역에서 ... 소련의 정치·경제·군사·사회적 이익을 ... 영구히 지킬 인물들로 구성된 정권을 구축하기까지”라는 표현으로 보아 부르조아 민주주의 정권이란, 저자가 표현하는 ‘소련에 우호적’이기보다는 더욱 강력한 의미의 親蘇 정권을 구축하려는 의미로 읽어야 할 듯하다. 戰後 소련의 점령지역에서 탄생한 사회주의 정권들을 냉전기에는 소련의 위성국가라고 불렀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소련 자신이 의도했던 바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평가가 다루는 내용은 저자의 책에서 소련의 대북정책에 관한 부분에 국한해서이다. 지금까지는 다만 저자의 견해에 동의하는 한에서 어쭙 잠깐 끼어든 감이 있다. 책 전체의 내용에서 나머지 부분은 평자의 공부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전혀 새로운 부분도 있어 언급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책을 읽는 다른 독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저자의 견해에 보충하는 내용을 적어 본다.

첫째, 帝政 러시아는 저자가 지적하듯이 不凍港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데 그 배경으로는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한 基地의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완성되기 전에는 陸路를 통해 極東에 도달하는 것보다 海路를 통해 극동에 도달하는 것이 더 빨랐다고 한다. 그래서 국내통치를 完整備하기 위해서라도 항구가 필요했음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제정 러시아나 신생 소련도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어 領土完整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일본과의 무력충돌을 회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인 반스와 김일성의 1946년 10월 6일자 대담 기록에 의하면, 김일성은 남한 좌파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반스의 질문에 이승만과 김구는 조선을

역사적으로 퇴보시키는 반민주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그 세력과는 통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반스는 김구나 이승만은 확실히 나쁜 자들이고, 김규식은 인민들 사이에 영향력도 있고 친일세력과도 투쟁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일성의 의향을 묻는데, 김일성은 김규식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하지만, 김구에 대해서는 강양욱의 親知에 대한 테러 살인에 김구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결국 그런 김일성에게 김구와 김규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찾아 갔을까하는 점을 생각하면 역사의 아이러니를 새삼 확인한다.

사실 저자가 지적하듯이 냉전이 해소된 이후 러시아에서 공개된 자료들이 아직 日淺할지언정 많은 부분에서 학계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 잡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평자가 첨가한 많은 부분들도 자료의 발굴과 함께 좀 더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는 책의 머리에서 역사의 '復原'이라는 표현을 썼다. "역사는 과연 '복원' 되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기왕에 저자가, 그리고 평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학문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던 것들이다. 문서로 입증된 점만 빼고는 새로운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신상초, 양호민, 박동운, 이명영 등의 연구가 그렇다. 그것은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이데올로기의 포로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데올로기를 체험한 이들의 생생한 기록들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당시 살았던 대다수 사람들의 집단적인 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전통주의적 입장이라고도 한다. 이 같은 기억은 살아보지 않고 문서나 남의 얘기만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발굴된 舊소련의 문서들이 많은 부분 이러한 당시 기억과 이에 기초한 주장들이 타당했음을 입증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가 말하는 '역사의 복원'은 '기억의 복원'이라고 바꿔 말해도 무방할 듯하다. 기억은 개인적일 수 있지만, 그러한 기억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재구성되면, 사실에 가까운 기록을 남길 수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의 연구는 기존의 소위 전통주의적인 입장의 주장을 한 선학들에게 후학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셈이 된다. 이 점에서 평자와 같은, 저자에게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후학들은 저자에게 빚을 지게 된 셈이다.